

칼럼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안전 중독자가 되자



정 내 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반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국가 개조 차원의 안전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와우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혁신적으로 국민의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건설산업에 있어 안전은 건설 근로자 안전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2만 3,600명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516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절반에 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안전모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36.1%, 안전화는 45.7%, 안전대는 62.9%에 이른다.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안전관리자 중 30% 정도만 정규직으로 채용할 정도로 건설 근로자의 안전 수준은 취약하다.

도시 인프라 시설물도 노후화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대형 인프라시설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이고, 10년 뒤에는 4,211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 준공된 건축물 681만여 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30%에 불과하며, 서울 지하철도 1~4호

선은 3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에서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건설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몸에 밴 '빨리빨리'와 '설마'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모든 사고는 기본을 망각한 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인 스스로 직업 의식과 윤리의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둘째,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복지가 되어야 한다.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 발주기관은 예산 절감보다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셋째, 노후 인프라 시설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라이프 라인임에도 우리 곁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하루 빨리 기존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설계·시공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 발주자, 기업, 건설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주체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안전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 CERIK